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WEEKLY NEWS

주간대학소식

http://www.kcue.or.kr/news/weekly_list.php

01 고등교육 정책 동향

- 교육부, 2014년도 6,039억원 규모 학술·연구지원 추진..... 02
-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07
- 유학생 유자·관리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09
- 대학교육 역량의 척도 "대학알리미" 12
-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사전예방 실시 현황 14
- 일본 고등교육 동향 : 대학입시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15

02 입법 소식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입법 예고(대입전형기본사항, 대입전형시행계획 관련) 19

03 대교협 소식

-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23
- 입학사정관제 드림멘토단 워크숍 개최 24
- 한국대학평가원-한국행동과학연구소 MOU 체결 25
- 대교협, 삼성그룹 '재능제도 개편방안' 적극 환영 26
-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총회 27
-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총회 28
- 대학글로벌연계학습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참가 및 2014년 1차 사업 공모 및 설명회 개최 29
- 대교협 <대학교육> 발간 안내 30

04 기타

- <붙임1>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 대입전형기본사항·대입전형시행계획 관련 31

01 고등교육 정책 동향

교육부, 2014년도 6,039억원 규모 학술·연구지원 추진

교육·연구지원·성과확산 및 대중화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인문학 진흥 방안 시행
지역대학, 소외 학문 분야 지원 확대 및 공과대학 혁신 지원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월 15일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2014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금년 종합계획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총 6천억원 규모의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 학술 기반 확충 및 성과확산 등의 사업을 총 망라하여 수립되는 첫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교육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2,237억원, 과학기술 기초연구에 3,314억원, 성과확산 및 대중화 등에 206억원 등 2014년 학술·연구에 총 6,03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문학 대중화 사업 규모가 '13년 29억원에서 '14년 6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학제간 융합연구도 '13년 34억원에서 '14년 5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그림1 >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추진방향

- 2014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연구자 양성”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실현의 원천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역대학 육성” 등 국정과제 실현과 “공과대학 혁신”과 같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다.

1 인문학 3.0실현을 위한 인문학 지원 강화

- '14년에는 인문학대중화 증액 예산 31억원을 포함하여 인문사회분야 지원규모가 전년대비 총 156억원 증가하였다.
- 교육부는 문화융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인문학 연구지원, 대중화를 넘어 “교육-연구지원-성과확산-활용 및 대중화”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인문학 1.0 : 인문학의 위기 후 인문학 전담 연구지원(HK) 추진('06)
- 인문학 2.0 :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에 따른 대중화 프로그램 보급 및 세계인문학포럼 개최('11)
- 인문학 3.0 : 초중등·대학교육에서 인문교육 강화, 인문연구지원을 통한 연구 경쟁력 제고, 성과 확산(실제 삶에 활용성 증대 등 소통·개방·공유)에 기반을 둔 국민 행복 실현('14)

* 논문(100%) 기준 단독저서 200% → 300%, 공동저서 100% → 200%

- 또한 인문사회 분야에서 저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술·출판 등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과제신청기준에서 저술 실적의 인정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 인문사회 분야 정액 연구과제(grant) 단가도 연구 현실에 맞추어 기존 9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증액한다.
- 세계적 인문학 분야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3회 세계인문학 포럼”('14.10월,

대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대전에서 개최되는 만큼 “질주하는 과학기술시대의 인문학”을 주제로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창조적 융합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 연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사 분야 연구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 특히 '14년에 한국사 분야에 40억원이 별도로 지원*하여 연구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 중견연구자지원 신규과제의 7% 내외(7억원), 일반공동연구 신규과제의 3% 내외(3억원), 토대연구지원에서 한국사 분야 신규 4과제(10억원) 선정
- 아울러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한 고대·상고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사 관련 연구기관*간 합리적 역할 분담에 기반을 둔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 예술·체육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예술체육 전담지원 사업(가칭 AsK : Arts & sports Korea)을 인문사회 대학중점연구소사업내에서 시범 추진한다.

2 지역대학 육성 지원

-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를 모두 지역대학 부설연구소로 선정*하고, 인문사회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는 지역대학에 집중 지원한다.
 - * 이공중점연구소 신규 4개 과제 내외 34억원
- 아울러 지역대학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리서치펠로우* 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시 지역대학 연구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 * 정부가 제시한 기준(3년 계약, 4대 보험 가입, 월300만원)에 따라 대학이 채용한 계약직 전임 연구인력
- 과제 선정과정에서 동점자 발생시 지역대학연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3 공과대학 혁신 지원

- 공학 분야 및 공과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특허, 기술이전, 지역산업과 연계 정도 등을 과제 선정평가, 중간·결과 평가 등에 반영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특히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 평가시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향후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특허,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성과의 인정비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4 기타 주요 과제

-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수 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 계속과제의 갑작스런 증가*로 인한 신규과제 수 급감에 대응하는 동시에, 매년 신규과제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4년에는 신규과제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종전 3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 '10~'11년 사이에 선정한 5년과제('12년 이후 미선정)와 '12~'13년 사이에 선정한 3년 과제의 계속지원기간 중복
 - ※ 지원기간 조정시 '14년 기본연구 신규과제 수 변화 : 550여개 → 1,100여개
- 실패위험이 높지만, 창의적인 실패위험이 높은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이에 대한 초기 연구를 지원한다.
- 이공분야에서는 “한국형 SGER*”이 시범적으로 실시(개인기초연구 50과제 내외)되며, 인문사회분야는 개인연구 신규과제에 창의·소외 및 융합연구 분야를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한다.
 - * 한국형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 에세이 형식으로 연구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 받아 이에 대해 전문가(PM)가 평가하고, 최적의 연구자를 추천하여 별도지원하

는 프로그램으로 실패가능성을 전제로 보다 창의적·실험적 연구과제를 발굴·지원

** (창의·소외 지원) 인문사회 개인연구(학문후속/신진/중견) 신규예산의 5% 내외
(융합연구 지원) 인문사회 개인연구(중견), 일반공동연구 신규예산의 5% 내외

- 아울러 인문사회분야 과제평가시 창의성·도전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과제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연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학술·연구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 교육부는 2014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14.1월말부터 총 4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인문사회 기초연구 및 학술기반 확충사업 관련 권역별 설명회는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 인문사회 기초연구 및 학술기반 확충사업 권역별 설명회 >

- 수도권 : 1.17(금) 14:00, 성균관대학교(서울) 600주년 기념관 조병두 홀
- 영남권 : 1.21(화) 14:00, 경북대학교 효석홀
- 충청·강원권 : 1.22(수) 14:00, 대전대학교 블랙박스홀
- 호남권 : 1.24(금) 14:00,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 아울러 이공분야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미래부와 합동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 합동 설명회 : (수도권) 1.23(목) 숭실대학교, (충남부권) 2.6(목) KAIST

** 미래부 합동 설명회 : (영남권) 1.27(월) 부산대학교, (호남권) 1.28(화) 전남대학교

※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1단계('12~'13) 사업에 대한 단계평가 실시 (미흡 대학은 탈락)

신규대학 선정 진입 (4년제 12개교 이상, 전문대 4개교 이상)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산학협력 진화형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현장적합성 높은 대학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14년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4년도 사업 예산은 4년제 대학의 경우 2,388억원으로 총 57개교를, 전문대학의 경우 195억원으로 총 30개교를 지원한다.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peration

□ LINC사업은 '12년부터 도입되어 오는 2월 28일까지 2년간의 1단계 사업 기간('12~'13년)이 종료되고, 이어서 3년간의 2단계('14~'16년)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수행해 온 기존 LINC사업단(4년제 대학 51교, 전문대학 29교) 중에서 사업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탈락되고, 신규 대학을 선정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 한다. 특히,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창업교육 내실화, 창의인재와 기술·특허·아이디어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적 자산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며,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방안”(‘13.10.)과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13.12.) 등 주요 정책 내용을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중점 추진할 것이다.

<표 1> “4년제 대학” 단계·신규·비교평가 체계

구분 (사업 유형)	1단계 사업단 (수)	단계평가				신규 선정평가		2단계 사업단 (수)	
					비교평가 (14개교 확정)				
		상위 60% (계속참여)	하위 ④ (보통이하)	최하위① (강제탈락)	보통 ④-⑤ (탈락유보)	예비 (차상위)	진입선정 (최상위)		
기술혁신형 (전국)	14	8	6	1	5	5	2	15	
현장 맞춤형	수도권	5	3	2	1	1	1	2	6
	충청권	8	5	3	1	2	2	2	9
	호남·제주권	8	5	3	1	2	2	2	9
	대경강원권	8	5	3	1	2	2	2	9
	동남권	8	5	3	1	2	2	2	9
합 계	51개교	31개교	20개교	-6개교	14개교	14개교	12개교	57개교	

□ 단계평가는 LINC 사업 단계별 중점 목표(1단계 : 기반 조성 및 내실화, 2단계 : 성과 창출 및 확산)를 고려하여, 1단계('12~'13년)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2단계('14~'16년) 사업 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수요자(학생, 산업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단계평가 결과, 우수 사업단(상위 60% : 4년제 대학 31교, 전문대 18교)은 2단계 사업에 계속 참여하게 되나,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단은 강제탈락하고 '보통사업단'은 신규 '예비사업단'과의 비교평가를 거쳐 재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신규 선정평가는 2단계 사업에 신규로 신청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산업체 만족도 조사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4년제 대학 선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상위 12개 사업단(5대 권역별·사업 유형별 2교씩)은 우선 선정되며, 차상위 사업단은 '예비사업단'으로 판정되어 단계평가 결과 '보통사업단'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산학협력 진화형 교원인사제도,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등 산학협력 기반의 내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과 창업교육 내실화, 혁신기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 교육부는 1월 중 사업 공고를 마치고 3월초까지 대학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와 산업체 수요자 설문조사를 거쳐 5월중에 2단계 LINC 사업 참여 대학(사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의 LINC사업 추진을 통해서 대학들이 산학협력 진화형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학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이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기업의 매출 상승과 고용 창출까지 연계되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하는 등 대학과 지역의 공생 발전과 창조경제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인증대학 49개교 및 비자발급제대학 13개교 확정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 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1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 인증위원회는 서면심사*와 현장 정성평가**를 거쳐 인증대학 49개교 및 비자발급 제한대학 13개교를 선정하였다.

*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서면심사('13.9월) [별첨 1]

**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우수·하위대학 후보군에 대해 현장 정성평가('13.10월) [별첨 2]

□ 2013년도 선정 인증대학은 총 49개교이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대학 수)		인증대학 (49)
4년제 (42)	기존 (22)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건국대(글로벌), 고려대, 대전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국제대, 우송대
	신규 (20)	공주대, 부산대, 제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성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서울여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
전문대 (7)	기존 (3)	동양미래대, 한양여자대, 인하공업전문대
	신규 (4)	부산과학기술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창신대*

* 창신대는 '13년에 전문대에서 4년제로 전환되었으나, 기존에 재학 중인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평가받았으며 인증대학으로서의 혜택도 전문대 학생들에게만 적용됨

○ '13년 신규 선정된 인증대학은 24개교이며, 인증기간은 총 3년('14.3월~)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절대지표 기준값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이들 인증대학은 우수한 유학생 유치·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된 대학으로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양대는 유학생의 학업,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학기별 5회 이상 유학생 대상 간담회 및 학사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1회 재학생 무료검진 실시 및 유학생 입학 서류 진위여부의 철저한 확인 등 유학생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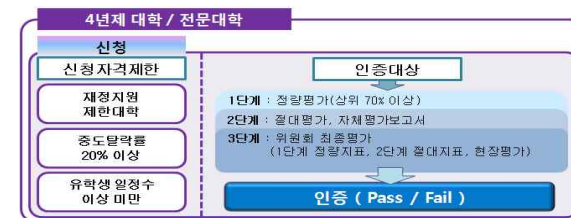
○ 경상대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진주시와 협력하여 매년 「경상 외국인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유학생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 취득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부산대는 유학생의 학업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학사경고자 상담제를 운영, 1대 1 성적 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취업 관리를 위해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 컨설팅, 단기 방학 인턴십 실시 등을 통해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서강대는 유학생 지정좌석제 및 출결담당 조교제를 통해 유학생의 출결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별 출결사항을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 유학생에게 통지하는 등 엄격한 학사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제주한라대는 유학생 관리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여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관리 전반을 경력개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인증대학 선정 방식



□ 한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와 정부 부처(교육부·법무부)는 인증제와 연계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를 점검하였다.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조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 의료보험 가입률 등 5가지 절대지표(전문대 4개 지표)를 중심으로 하위대학을 분류한 후,

-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비자발급제한대학을 선정하였다.

* 정량지표, 정성지표 평가결과 및 법무부 등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 '13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총 10개교이며, 기존 비자발급제한대학 중 비자발급제한 해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비자발급 제한이 연장되는 3개교를 포함하여 총 13개교가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확정되었다.

- 해당 대학들은 '14년 2학기부터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되므로, 유학생 신규 유치보다는 기존 유학생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비자발급 제한은 신·편입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에 한하며, 교환학생, 대학원생, 기 입학하여 학업 중인 재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4년제	전문대
비자 제한 대학	신규 (10)	경남과학기술대, 예원예술대, 충신대, 협성대	김천과학대, 대구과학대, 대림대, 대원대, 영남이공대, 전북과학대
	기존 (3)	가야대, 대구예술대, 수원대	-

□ 2013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우수한 인증대학 정보는 재외공관에 제공되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될 계획이다.

대학교육 역량의 척도 “대학알리미”

□ 대학정보공시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학알리미는 정기공시(연간 4회)와 수시공시를 통해 대학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대학 및 학과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며,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 발굴과 채용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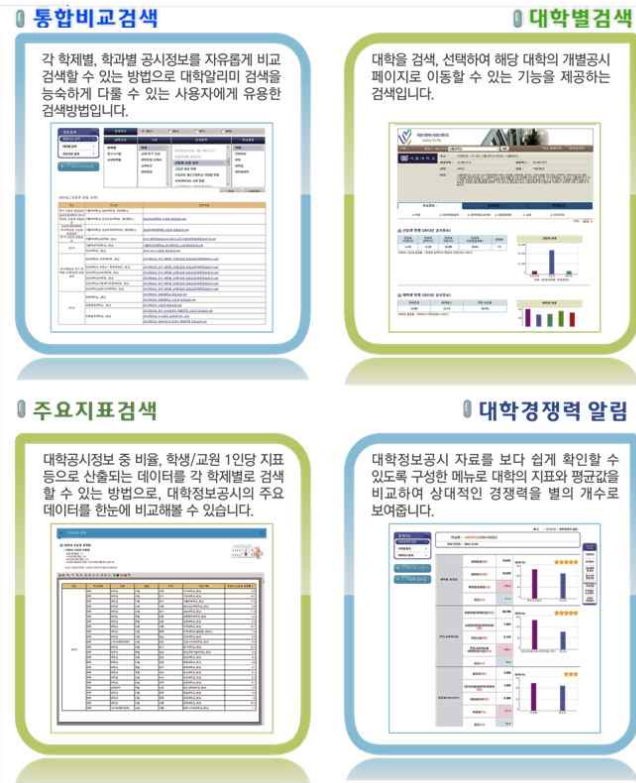
<표 1> 평가에 활용되는 대학정보공시 항목 사례>

공시정보 활용 주요 사업	지표값	대학정보공시 항목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	재학생 충원율	4-라-1. 재학생충원현황 4-마. 재직학생 현황
	교원 확보율	6-다.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2-가. 성적평가 결과 12-다-1. 강좌당 학생수 12-나-2. 교원 강의당당비율 14-차. 강사 강의료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6-라.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장학금 지급률	12-다-2. 장학금 수혜 현황 8-가-1. 국공립대 일반회계 현황 8-바. 교비회계 예산·결산 현황
	학생 교육 투자	9-나.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8-다-1. 국·공립대 발전기금 회계 현황-세입 8-아. 기부금 현황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8-차-1. 등록금 현황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재학생 충원율	4-라-1. 재학생충원현황, 4-마. 재직학생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6-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9-나.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2-다-2. 장학금 수혜 현황
	학점관리 및 교육과정 현황	2-가. 성적평가 결과 12-다-1. 강좌당 학생수 12-나-2. 교원 강의당당비율 14-차. 강사 강의료
	장학금지급률	12-다-2. 장학금 수혜 현황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8-차-1. 등록금 현황
	정원감축 가선택점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산학협력역량지수 (전문대학만 해당)	6-다. 전임교원 확보율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 또한, 정부기관과 연구자에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고등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와 각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 대학알리미 자료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 구조조정 등에 핵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대학에는 대학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책 활용 현황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국립대학 특별관리 선정평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평가 등)

□ 대학정보공시 자료는 대학알리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 변환하여 가공·활용이 가능하다.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사전예방 실시 현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험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보호하고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을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22,799명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 대입지원 위반자 검색 결과 (총 위반자 수 : 22,863명, 기준일 : 2014. 1. 8(수))

- 수시지원 6회 초과자 : 770명
- 수시모집 예치금 이중납부자 : 20,639명
-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 후 정시모집 지원자 : 783명
- 정시모집 동일모집군 복수 지원자 : 671명

○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 현황 (총 예방자 수 : 22,799명, 기준일 : 2014. 1. 8(수))

- 수시지원 6회 초과자 예방 : 770명
- 수시모집 예치금 이중납부자 예방 : 20,638명
-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 후 정시모집 지원자 예방 : 720명
- 정시모집 동일모집군 복수 지원자 예방 : 671명

□ 대교협은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진행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대교협, 해외 고등교육 동향 정보 기획 연재]

일본 고등교육 동향 : 대학입시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달성도 테스트” 도입 및 “능력·의욕·적성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

대교협, 해외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안 파악과 정보제공
그 일환으로 본 지에서 '일본 고등교육 동향' 기획기사 게재



1. 도입 취지 및 배경

- 대학입시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교육재생실행회의”¹⁾는 지난 2013년 10월 31일 현행 대학입시시험(대학입시센터시험)을 개편하여 성적을 점수가 아닌 등급제를 도입하고 한번이 아닌 복수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고, 의욕과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면접 등에 의한 ‘인물중심’ 선발로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의 제언을 내각에 제출²⁾.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대학진학율은 50%³⁾를 넘어섰고, 대학정원과 지원자의 수가 비슷한 소위 ‘전입시대(全入時代)’에 들어서면서 모두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이 감소 추세임.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의 점수위주의 입시를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의욕과 잠재능력을 반영한 ‘인물중심’의 선발로 전환 필요

1) 교육재생실행회의: 아베내각의 교육자문기관으로 2013년 1월 발족. 21세기 일본에 맞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재생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회의기구로 설치되었고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및 문부과학대신 겸 교육재생담당대신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 회의의 검토과제로 ①집단따돌림 문제, ②교육위원회 개선, ③대학개선, ④글로벌 교육, ⑤6.3.3.4 학제시스템 개혁 등에 대한 심의를 추진 중이며 4차에 걸친 교육개혁 제언을 내각에 제출(1차 집단따돌림 대응방안, 2차 교육위원회제도, 3차 대학교육의 방향, 4차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대학입학선발 방향)
2) 금번 4차제언은 ①고교교육의 질확보·향상, ②대학의 인재육성기능 발본적 강화, ③능력·의욕·적성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학입학선발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언이 이루어졌다.
3) 고졸자의 대학진학율은 대학·단대진학율(55.1%), 대학(학부)진학율(49.9%), 전문학교진학율(17.0%)이며, 고등교육기관진학율은 77.9%이다. < 문부과학성 2013년도 학교기본조사 참조>

- 이를 위해 고교교육의 기초적·공통적인 학습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각 대학의 판단으로 추천입시와 AO입시에 활용하며, 각 대학의 창의적 방법으로 능력·의욕·적성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판정할 수 있는 입시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달성도 테스트”를 도입할 것을 제언

- 추천입시 확대 등으로 학력 불문하고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증가하면서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교생의 학습의욕을 높일 목적에서 한번이 아닌 복수로 실시함으로써 수험생의 본질적 능력을 측정하고 대학입학 선발기준으로도 활용

2. 주요 내용

- 현행 대학입시센터시험을 개편하여 달성도 테스트를 도입하고 성적을 점수가 아닌 ①상위에서 하위까지 등급분류, ②복수에 걸쳐 실시, ③ 대학별 2차시험(본고사)을 의욕과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능력·의욕·적성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
- 달성도 테스트는 기초레벨 테스트와 발전레벨 테스트 2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실시체제, 시기, 명칭, 제도적·재정적 측면의 정비는 고교교육 활동 등을 배려하고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교육심의회의에서 전문적·실무적 검토를 거쳐 향후 5년 후 실시를 목표로 추진계획

○ 기초레벨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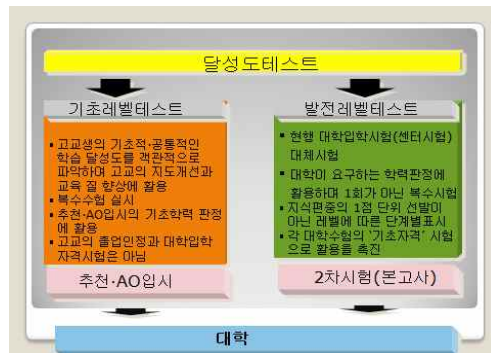
- 고교교육의 질확보와 향상을 목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기초적·공통적인 교과·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고교 재학 중에 복수시험
- 기초레벨 테스트 시험내용은 기초적·공통적인 교과·과목의 학습달성도에 대해서 지식·기능뿐만 아니라 그 활용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포함한 폭넓은 학력을 파악·검증
- 고교생의 졸업인정 및 대학입학 자격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학교와 학

생에게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지도개선과 학생의 학습의욕 환기 및 학습개선을 유도하고 추천·AO입시의 기초학력 판정테스트로 활용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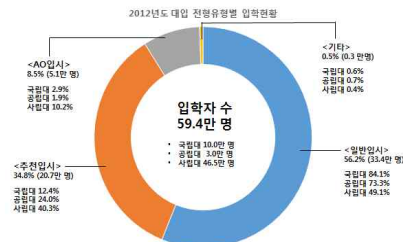
○ 발전레벨 테스트

-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판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며 각 대학의 판단으로 이용가능. 시험교과·과목 등을 감안하여 복수시험 실시(현행 대학입시센터시험 대체 시험)
- 대학교육에 필요한 능력판정이라는 관점에서 교과·과목 등의 출제내용을 검토
- 점수위주의 1점 단위 선발이 되지 않도록 시험결과는 레벨에 따라 단계별로 표시

<그림1> 교육재생실행회의가 제안한 달성도테스트 이미지



<그림2> 2012년도 대입 전형유형별 입학현황



3. 대학입시개혁안에 대한 일본 주요 언론 반응

○ <포털사이트 야후 양케이트조사> 발췌

- 수험생의 학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학생의 서열화 및 학업이외의 동아리 활동 등이 소홀해질 우려. 센터시험과 달성도 테스트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9%가 연1회의 센터시험을, 44.5%가 달성도 테스트를 선호

○ <NHK 2013.11.18. 뉴스해설> 발췌

- 2차시험(대학본고사)을 각 대학의 창의적 방법으로 능력·의욕·적성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판정할 수 있는 선발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정부가 각 대학에 대해 이러한 선발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아사히신문 2013.11.1. 기사> 발췌

- 인물평가는 노력이 많이 듦. 현재 모집정원에서 인물평가선발 인원을 증원하면 평가척도가 조 잡해질 우려(도호쿠대 입시센터장 의견)
- 와세다대학은 교내에 입시개발오피스를 설립하여 '필기시험 중시에 벗어난 평가방법' 개발에 착수함. 그러나 매년 수험생은 10만 명으로 전원 면접평가는 무리이며 미국처럼 교원이 아닌 전문적 입학사정관 양성이 필요(와세다대 총장 의견)
- 일발승부인 현행 입시제도는 문제가 많으며 개혁이 필요. 일정한 레벨을 충족한 학생은 모두 입학시켜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제도로 전환해야함(분교대 부속중학교 교장 의견)

○ <마이니치포럼 2013.12.14. 기사> 발췌

- 마이니치신문은 신입시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형 50명에게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
- 현행 일발승부형 입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수험생의 능력·적성 등을 다면적으로 판단하는 선발방식에 대해서는 공정성, 객관성 확보문제 등 평가 방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

02 입법 소식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법령 제·개정,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
-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에 결혼 이주민 및 일반고·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도 포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정원의 특별전형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월 24일(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14.1.1. 공포, '14.4.30. 시행)됨에 따라 변경 사유 등을 정하고,
- 결혼이주민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 입법예고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입전형기본사항·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절차 등 마련

- 앞으로 대학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 대학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는 교육부가 지난해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수립시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던 사항으로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입법화하게 되었다.
- 한편, 학교협의체와 대학은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계획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 확대

-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도 정원의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된다.
 - 현재는 정원의 특별전형의 대상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정원의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된다.
 - 현재는 정원의 특별전형의 대상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되어 있다.
-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정해짐에 따라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제한되어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정원의 특별전형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른기회 전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포함시킴에 따라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3.1.24~3.5)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

□ 교육부 공고 제 2014-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교육부장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에서 위임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이후 변경 사유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또한, 해외에서 초·중등교육 전과정을 이수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아울러, 재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취업 추진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고등학교 및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의 경우도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을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민도 포함되도록 확대함(안 제29조 제2항 7호).

나. 일반고등학교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도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함(안 제29조 제2항 14호 마목).

다.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안 제32조제1항).

라.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이후에는 법령 제·개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32조제2항).

마.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안 제33조제1항).

바.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소속되어 있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33조제2항).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367 (FAX : 044-203-6257))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고등교육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 대입전형기본사항·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및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 확대> 관련 원문 <붙임> 참조

03 대교협 소식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대전 유성 호텔에서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에 따라 변화된 대입제도에서의 입학사정관제(학생부 종합전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고교와 대학 간 학생 평가 관련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대학입학사정관 및 고교진학진로담당교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 시행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운영 방향’을 주제로 한 김무봉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1부 ‘입학사정관제의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 2부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리뷰’ 순서로 6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주제별로 입학사정관들과 고교교사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입학사정관제 드림멘토단 워크숍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월 22일(수)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입학사정관제 드림멘토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방안 및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입학사정관제 드림멘토단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전국 대학 1~2학년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고교 교사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의 실체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만들어졌다.

□ 이들은 대교협 홈페이지(univ.kcue.or.kr)의 ‘선배가 들려주는 입학사정관제’ 코너에서 온라인 상담 및 대학입학정보박람회(수시·정시) 등에서 오프라인 상담을 하면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평가원-한국행동과학연구소 MOU 체결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과 한국행동과학연구소(소장 이종승)는 1월 22일(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두 평가 전문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고등교육 평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 기관은 학술정보의 공유와 효율적인 활용이 지식기반사회의 원동력이자 양 기관의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건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할 것을 협약하였다.

□ 주요 협력 내용은 강의·연구를 위한 파견근무 등 인력의 상호 교류,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회의의 추진, 각종 교육 및 연구, 평가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연구·개발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교환, 저작권 협력, 도서관, 강의실 등 산하 및 부속기관의 이용, 교육·연구기자재 공동 이용, 기타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 양해각서에 따라 이번 협약은 3년간 유효하며, 공동연구와 자문을 시작으로 향후 각종 학술·연구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교협, 삼성그룹 ‘채용제도 개편방안’ 적극 환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시험이 아닌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삼성그룹 채용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 대교협은 삼성그룹 채용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학벌주의 채용과 스펙중심 채용을 전면 개선하여 능력중심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재를 시험이 아니라 대학 추천에 의해 채용하는 이번 제도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대교협은 “앞으로 대학은 조금의 부작용 없이,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대학의 명예를 걸고 추천할 것”이며 “대학들도 학생선발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시키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삼성그룹의 선도적인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계 전면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정기총회

- 2014년도 <제1차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정기총회가 1월 16일(목) 서울시립대 대회의실(대학본관 7층)에서 열렸다.
- 총장협의회는 이날 대학 내 호텔업 합법적 운영 근거 마련, 국내 학점교류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제도 개선 T/F 진행경과 등에 관련된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 또한,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강릉원주대, 경남과기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등 전국 2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장협의회 회장 임기는 1년이다.
- 남궁근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구조조정의 위기와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수확보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총회



-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송영무)는 1월 15일(수) 광주여대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21개 회원 대학교 가운데 12개 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이번 총장협의회에서는 지역대학의 현안을 논의하고 각 대학간 유대를 강화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광주·전남 지역의 21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천대학교가 회장교를 맡고 있다.

대학글로벌현장학습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참가



□ 젊은 취업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볼 수 있는 글로벌 취업창업대전이 1월 10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취업창업대전을 통해 특히 IT에 강한 우리나라 젊은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해외업체는 150여개였으며, 취업관과 창업관으로 나뉜 해외취업 설명회와 외국인유학생 채용상담, 창업자를 위한 해외창업 멘토링 등을 11일까지 진행하였다. 대교협 대학글로벌현장학습도 참가하여 대학생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홍보를 진행하였다.

2014년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1차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사업 1차 공모를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시행한다. 또한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1월 28일(월) 15:00~17:00에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2014년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사업 설명회

- 일시 : 2014. 1. 28(월) 15:00 ~ 17:00
- 장소 : 서울역 대회의실 (서울역사 4층)
- 대상 : 사업 참여에 관심있는 대학 관계자

대학글로벌현장학습은 교육부 주관 정부해외인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에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전공실무 능력 및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 모집분야는 지정분야와 자유분야이며, 대교협은 사업 선정 대학에 언어권별 1인당 250~5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하며 학생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신흥국가 추가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2014년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차년도 사업 신청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교협 <대학교육> 발간 안내



□ 대교협 조사분석팀에서는 「대학교육」을 계간으로 발간해 오고 있다. 30년 대교협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온 「대학교육」은 기관지로서 대학교육에 관한 전문 정보 제공을 통해 회원대학과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다.

□ 2014년 1~3월호 「대학교육」에는 대학이 사회 변화를 예견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변화와 대학의 대응”이라는 특집 주제 아래 ‘사회변화 메가트렌드와 대학교육’, ‘대학의 개혁 방향’, ‘사회변화와 대학평생교육’ 등 3편의 글이 실렸다.

□ 조사분석팀에서는 향후 의견수렴과 개선을 통하여 기관지로서의 「대학교육」이 좀 더 회원대학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원대학에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붙임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

대입전형기본사항·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및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 확대> 관련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29조 제2항제7호 중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의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학교협의체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①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3.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의 행정처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입학·편입학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입학·편입학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및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의해 귀화 허가를 받은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독·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현행	개정안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대학의 학생 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학교협의체는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①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3.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의 행정처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